

데스크칼럼

양동민

정치부장



이제 봄이다. 긴 겨울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부터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난 낙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 겨울은 잔혹하기 그지 없었다. 국민에게 충구를 겨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국민을 ‘적’으로 여겨 ‘제거’하려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을 저지른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위헌이자 불법인 내란을 정당화하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선거가 ‘부정 선거’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도 흔들려 했던 자는 파면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지나긴 겨울을 보냈다. 광장을 지킨 시민은 긴 겨울 동안 눈과 비, 그리고 차디 찬 바람만 견뎌야 했던 것은 아니다. 100여 일 전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함께 슬퍼했고,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산불에 애를 태우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현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고, 그가 지난해 12월 3일 야당의 정치권 공세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봄’이다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현재는 쟁점에 단호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소추 사유의 변경·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인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군인·경찰 투입으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도 인정했다.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헌법기관 독립성을 저해했고, 범조인 체포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해 사법권 독립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이 모든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으로 빛아지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일침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이 개인을 향한 인식 공격성 비난을 감내하고 속단의 유혹을 이겨내며 이룬 명쾌한 결정이다.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했다는 평가 대부분이었다. 광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탄핵 정국이 끝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로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한 광주=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모인 2500여명(주최 추산)의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파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 시민들은 “파면이다!”, “와, 탄핵!”이라며 짧은 함성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거나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임에도 우리가 속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 지 만났을 드러냈다. 우리의 민주공화국 정체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뒤집힐 수 있을 만큼 취약함을 드러냈고, 국가위기에 서도 정치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 역할만 했다. 지방 정부도 어려움을 겪기는 별반다르지 않다. 인공지능 대표도시, 국립의과 대학 신설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간 공들인 주요 사업들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대통령 파면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오는 6월 3일이 유력한 대통령선거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탄핵심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때론 평만 뒤엎는” 일을 반복만 할 것인가. 보철 누군가는 땅을 일구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또 다른 누군가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사람과 정권은 달리도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

이젠 둘로 쪼개진 민심, 하나로 만들때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이날 탄핵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파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그는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된 것이다. 그는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립 현충원 안장, 연금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정하는 조기 대통령선거도 치러지게 됐다. 문제는 이번 윤 전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극심하게 둘로 쪼개진 민심이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지난 5일에도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의 국민의 힘 해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탄핵 자축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기 탄핵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탄핵 불복 집회가 열렸다. 다행히 이날 양 세력간의 충돌은 없었지만 자칫 조기대선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이들의 갈등이 더 첨예화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윤 전대통령 파면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예전의 악습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소속 당 후보로 선출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란다.

트럼프발 관세폭탄 피해 최소화 하길

우리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광주지역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예고된 한국 생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25% 관세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전체 수출중 미국 비중은 33.1%로 이는 울산 26.6%, 세종 24.6%, 대구·대전 23.4%, 경남 22.7% 등과 비교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먼저 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30% 가량을 차지하며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가 피해 사정권에 들어갔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51만3782대를 생산해 내수판매 18만1665대를 제외한 33만2117대를 수출했다. 전체 물량의 65%를 수출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수출은 소울, 셀토스, 스포티지 등 3종 18만여대로 전체 물량의 35%, 수출 물량의 55%나 된다. 이번 25% 상호관세조치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는데다. 프리미엄급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냉장고는 지난해 수출액 8억3400만 달러중 6억5100만달러, 무려 78.1%가 미국행에 올랐는데 이중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저하에 따라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11.2%인 8900만 달러어치 타이어를 미국에 판 급호타이어 역시 매출 저하를 걱정할 처지다. 이 때문에 광주시도 피해 예상 지역 중소기업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출진흥자금 지원 규모를 3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파악된 피해 예상 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960개소 중 기계, 금형, 공기청정기 등을 직접 수출하는 115개소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을 제외한 수출길 다변화와 물류비 지원, 신시장 개척 등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 트럼프발 관세폭탄은 이제 발동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가 적극 나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기고

강운철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장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영광군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하지만 6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잡았다. 단순한 수치의 나열을 넘어, 이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보육 정책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일자리’와 ‘생활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와 투자유치 전략이 지역의 젊은 일자리를 견인하고 있다. 군은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묘량농공단지 개발을 완료했으며, 향후 분양을 통한 영광군 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해 입주기업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2024년 11월 시속 완료해 운영 중에 있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 37개소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정비, 폐수처리시설 운영, 공영·가로수 정비 등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입주기업에 쾌적한 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광군은 분양 받은 기업이 초기 투자 시 산업융자 취득비의 20%, 시설 투자 인정금액의 10%를 지

영광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매출이자 일부를 지원 해주는 이차보전 지원, 병역특례기업 지정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투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전기료 지원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인원의 증대를 유발하고 이 인원의 지역 정착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 보조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기업 적기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도모하고 산업생태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내수활성화 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시 연중 할인(5%) 및 인센티브(10%) 혜택 제공과 각종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스마트전통시장 지원 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노후된 환경을 정비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비와 이차보전 지원, 배달수수료 및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구입 지원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풀어나갈 방식이다. 영광군은 단순히 고용 수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보육·교육·돌봄과 연결되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예를 들어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구직자 취업 상담(알선) 등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 취업 서비스 지원부터 구직자 취업과 사후관리까지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 재취업, 여성 경력단절 예방, 청년 취업역량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 일자리로 신규채용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취·창업 지원과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의 이직률 감소 및 정착을 향상에 힘써 지역 내 고용률 제고와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했다. 이렇듯 영광군의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동안 지역의 인프라와 경제 생태계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자리·복지·교육이 연결된 구조를 탄탄히 만들어온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스마트 농업 육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유통산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같은 단지 영광만의 미래가 아닌, 전국 많은 인구소멸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취재수첩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 중 하나다. 4개월여의 민주주의 확산기를 맞았던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었다. 현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 국민의 승리, 정의와 상식이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위헌·위법적인 권한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결과였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즉, 현재의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장기화된 불안정한 정국과 혼란의 골데에서 벗어나 조속히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야 한다. 갈등 조장과 선동을 멈추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도, 대행체제의 정부도 국민적 일상회복과 국가적 위기관복을 함심해 해결해야 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